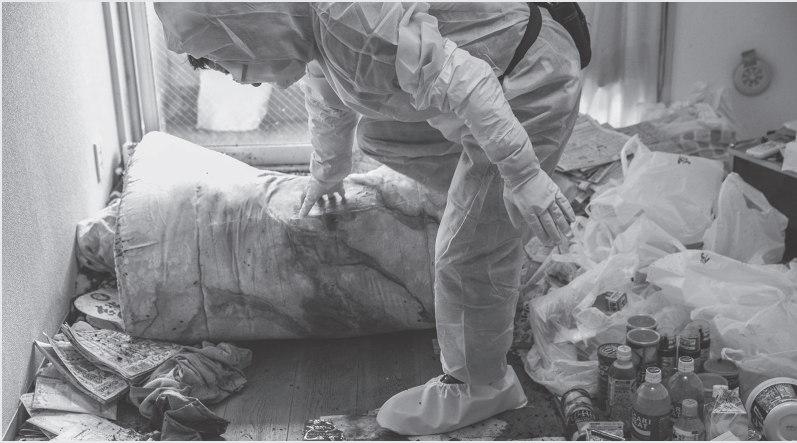


1/ 일본의 고독사 담론

커뮤니티 담론의 전개와 일본 고령자복지의 방향성* **

오독립



고독사한 고인의 방을 정리하고 있는 일본의 특수청소업자

출처: <https://courier.jp/news/archives/117241/>

오독립(吳獨立)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학술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박사학위(사회과학)를 취득한 후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 조교(助教)를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 도시/지역 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후쿠오카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현대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일본의 복지 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작 및 논문으로는 『「孤独死現象」の社会学: 実在, 言説, そしてコミュニティ』(2021), 『「当事者/宣言」としての「孤独死」現象: 『〈当事者宣言〉の社会学』のための概念の再構成とその適用』(2022)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2022년 지역사회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해 작성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3.28.20>

1. 들어가며

방 안 가득 날아다니는 파리떼, 바닥을 뒤덮은 채 꿈틀대고 있는 무수한 구더기, 정돈되지 않은 채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실내의 풍경,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고령자의 주검 등 고독사가 보고되는 장면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러한 이미지들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끝에 놓인 마지막 풍경으로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한없이 쓸쓸하게 비친다.

1인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의 심화 등과 같은 흐름 속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후의 삶 또한 그리 특별하지 않은 모습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하게 죽는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로 굳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지분이 그만큼 커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독’과 ‘죽음’은 어느 시대의 개인이든 그들의 고민의 목록에 빠지지 않았던 문제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고독’과 ‘죽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대응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사회적 고독/고립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에는 매우 빈번하게 ‘커뮤니티’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커뮤니티의 쇠퇴(붕괴)라는 현상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고독하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은 커뮤니티를 재생/구축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되는 담론의 생산과 소비는, 특히 일본의 복지 문제와 관련한 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커뮤니티에 대한 호소’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처방전에 쓰여 있는 커뮤니티라는 성분은 과연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의 작

업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고독사 현상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위에서 제시한 충격적인 이미지들과 더불어, 일본에서 고독사는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매우 빈번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독사가 일본에서 이야기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는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전개되어 온 양상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 및 정책 수립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담론적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지향적인 복지 정책 방향의 재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뒤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고독사는 합의된 정의를 지니지 못한 채 이야기되는 현상이며, 매우 다양한 차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다.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고독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리해서 특정한 정의를 전제하지 않은 채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¹ 그 자체를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 분석의 중요한 시각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고독사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시점에 입각한 고독사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 물론 고독사 담론 분석과 관련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고독사의 양상을 언급하는 몇몇 연구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고독사와 관련한 기사들의 추이에 대한 분석에 그치거나, 혹은 고독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가운데 부차적인 수준에서 담론을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 일본에서 고독사에 대한 학술적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신대지진 시기를 전후로 한 1990년대 중반부터다. 초기 고독사 연구는 재해지의 고독사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사인 등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관심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 기반한 고독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처럼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오야나기 료코(青柳涼子)²나 다카오 기미야(高尾公矢)³의 연구는 고독사와 관련한 신문기사 분석을 다루고 있지만, 중심 논의는 고독사의 사회적 배경이나, 특정 지역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 놓여 있었다. 호리 다카키(堀崇樹)⁴ 및 고쓰지 히사노리(小辻寿規)와 고바야시 무네유키(小林宗之)⁵의 연구는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고독사 관련 기사 분석이 중심에 놓여 있긴 하지만, 보도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담론’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분석으로서는 ‘무연사회론’ 등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주목해 볼 수 있지만,⁶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고독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접근은 기존의 고독사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고독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독사라는 현상의 담론적 특징 및 담론의 유형

1) ‘고독사’라는 현상과 담론

일본에서 ‘고독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용되는 듯이 보인다.

- 2 青柳涼子, 「孤独死の社会的背景」, 中沢卓実・淑徳大学孤独死研究会 編, 『団地と孤独死』, 中央法規, 2008, 79~103쪽.
- 3 高尾公矢, 「孤独死の社会学: 千葉県常盤平団地の事例をてがかりとして」, 『社会学論叢』 161号, 2008, 19~41쪽.
- 4 堀崇樹, 「新聞報道にみる孤独死の動向と問題の所在」, 『社会学論叢』 173号, 2012, 41~60쪽.
- 5 小辻寿規・小林宗之, 「孤独死報道の歴史」, 『Core ethics』 7号, 2011, 121~130쪽.
- 6 대표적으로 마쓰하시 다쓰야(松橋達矢, 「多様化する都市地域社会における『つながり(地縁)』の現在」, 『社会学論叢』 173号, 2012, 9~39쪽) 및 사카이 아키오(坂井昭夫, 「“無縁社会”考: 経済学の責務と若干の論点」, 『高崎経済大学論集』 54卷 4号, 2012, 13~27쪽) 등의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홀로 생활하던 사람이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다.⁷

하지만 이러한 진술을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로 보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고독사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사망 장소, 세대 유형, 자살에 대한 취급, 생전의 상황, 임종을 맞이할 때 보살핌의 유무, 연령 기준, 사후 경과시간 등 다양한 논쟁 요소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항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합의되기 어려운 다양한 정의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된 객관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도 고독사에 대한 공식 데이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고독사는 ‘죽음’이라는 명확한 발현 현상을 지니는 사태이긴 하지만 어떠한 하나의 죽음의 유형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니는 현상이기도 하다.

위에 제시된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독사는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죽음 이전의 삶의 문제 및 죽음이 발현된 이후의 사태까지도 아우르는 여러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애당초 명확한 기준선을 그어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고독사라 불리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측면이 강하다. 결국 고독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 현상이 관련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어떠한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고독사의 이러한 포괄적 성격은 그러한 다양한 대답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독사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현상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7 참고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2호] 제2조에서는 고독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 사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지극히 ‘담론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독사’라는 용어 자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고독’⁸이라는 생전의 상황이 ‘죽음’(및 죽음이 야기하는 결과)이라는 사태와 결합된 것으로서 인식된다. 고독사에 있어서 이러한 결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인식의 초점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요소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응 주체를 어디에 두고 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인식의 축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의 당사자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주변에 놓인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 혹은 당사자의 주변에 위치하는 공동체(커뮤니티)가 중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라는 귀결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귀결을 이끈 ‘삶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고독사라는 현상이 지니는 인식의 다양성은 고독사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 유형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 고독사 담론의 유형

실제로 일본에서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성격의 담론 유형이다.

복지/제도 담론은 ‘고독’(고립)이라는 사태와 관련한 죽음 이전의 상황과 죽음의 당사자 외부에 중심을 두는 담론으로, 여기서 고독사는 당사자의 죽음보다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인 맥락에 주목하면서 이야기된다. 즉 어느 한 개인이 혼자서(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죽음 그

8 여기에서 사용한 ‘고독’이라는 표현은 고립과 구분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 ‘고독사’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생전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자체보다는 그 개인이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사회적 원인 및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담론이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독사라는 죽음의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단지 특정 영역의 제도의 문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복지/제도’ 담론이라 표현한 것은 이것이 이러한 유형의 인식과 관련한 유일한 담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유형의 담론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것이 ‘복지/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을 의미할 뿐이다. 즉 일본에서 고독사가 제도적 차원과 관련해 이야기될 때에는 주로 고령자 복지와 같은 ‘복지’ 문제를 언급하는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복지/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러한 유형으로 관찰되는 담론은, 죽음으로 귀결된 어떠한 ‘고독’(내지 고립)이라는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을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해 국가/행정에 의한 제도적/정책적 문제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화 담론은 ‘고독’(고립)이라는 사태와 관련한 죽음 이전의 상황에 중심을 두면서도 복지/제도 담론과는 달리 ‘당사자’ 즉 개인의 관점을 취하는 담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론을 ‘개인화 담론’이라 표현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담론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고독사의 원인과 대처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담론은 고독사가 지니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담론이 ‘고독사’라는 현상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대두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고독사’와 관련한 하나의 담론적 지위를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독사라는 현상은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개인화 담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고독사가 고령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재해지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서, 개인을 넘어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인식의 측

면은 개인화 담론에 있어서도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화는 고독사가 그저 (특별한)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감정 이입을 가능하게 하여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독사의 일반화에 따른 리얼리티의 고조”⁹라고도 표현되는 이러한 특징은 두 가지 형태의 개인화 담론으로 이어진다. 그중 하나는 ‘고독’을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담론이다. 즉 ‘고독’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 기반해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또 다른 형태의 개인화 담론은, ‘고독’을 한층 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한층 더 높아지는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화 담론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한 문제 해결이 기본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해결은 ‘고독’의 문제에 있어서 제한적인 효과밖에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담론은 모두 개인의 책임과 ‘자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개인화 담론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담론은 고독사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중심에 두는 담론이다. ‘홀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못한 채 이루어진 죽음’과 이러한 ‘죽음의 방치’라는 발현 현상에 기반하는 인식은 ‘고독’이라는 사태의 귀결로 드러나는 ‘죽음’에 보다 중요한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드러날 경우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 방식은 ‘혼자가 아닌 죽음’, 혹은 ‘혼자이지만(즉 고독 내지 고립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그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문제의

9 中森弘樹, 「孤独死の言説からみる死の自己決定の変容: 新聞の投書記事分析」, 『社会システム研究』 16号, 2013, 192쪽.

초점이 ‘죽음’이라는 발현 현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태에 집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죽음을 어떻게 사전에 인지해 막을 것인가, 혹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죽음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커뮤니티 담론의 주된 진단은 (인간)‘관계’의 상실 혹은 부재로 이야기되며, 그에 따른 처방 또한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재구축의 언어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문제의 주인공으로서 언제나 당사자를 둘러싼 주변의 커뮤니티가 지목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화 담론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담론 역시 제도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떠한 길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도 개인화 담론이 결국 개인의 적극적인 수용과 대처로 귀결되듯이, 커뮤니티 담론 역시 최종 종착점은 언제나 커뮤니티로 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고독사라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혹은 대응해야만 하는) 주체로서 상정하는 ‘커뮤니티’라는 존재는, 많은 경우 단단한 관계의 끈을 지니고 있던 커뮤니티, 즉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커뮤니티이며 따라서 회복시켜야만 하는 커뮤니티인 것이다.

델란티(Gerard Delanty)는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 속에서,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커뮤니티에 대한 주요 담론을, ①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커뮤니티라는 담론, ② 회복 가능한 것으로서의 커뮤니티 담론, ③ 이후 달성될 것으로서의 커뮤니티라는 담론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다.¹⁰ 고독사에 대한 커뮤니티 담론이 빈번하게 관계 및 유대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개념은 커뮤니티를 회복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회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는 담론의 용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고독사 담론에 있어서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은 다음 장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고

10 델란티에 의해 이는 각각 ①은 보수적인 반모더니즘 이데올로기, ②는 근대보수주의의 주요 담론으로서, 대표적으로는 내셔널리즘 및 공화주의, ③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ジェラード・デランティ, 山之内靖・伊藤茂 訳, 『コミュニティ: グローバル化と社会理論の変容』, NTT出版, 2012, 28~30쪽).

독사 담론을 이끄는 가장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해 온 것이었다.

3. 일본 고독사 담론의 전개 양상

1) 1970년대: 커뮤니티 담론의 서막

일본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고독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970년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물론 ‘고독사’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고독사’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태에 대한 사례는,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시대의 신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¹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의 성격을 지닌 현상으로서 ‘고독사’라는 용어를 통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¹²

당시 일본에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서 인지되는 데에는,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적인 전략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 아래 관심이 높아져 온 ‘고령자 문제’라는 프레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70년을 전후로 일본에서는 ‘네타키리(ねたきり) 고령자문제’, ‘독거 고령자 문제’ 등 고령자 문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그 결과의 공표,¹³ 그리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고령화율의 증가¹⁴ 등을 배경으로 이른바 ‘노인 붐’¹⁵이라 불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3년의 ‘노인 의료비 무료화’라는, 일본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되는 정책 시행과 더불어

11 小辻寿規·小林宗之, 「孤独死報道の歴史」, 121~130쪽.

12 아사히신문의 경우, ‘고독사’라는 표현이 처음 기사에 등장한 것은 1970년 4월 6일자 기사였다.

13 대표적인 것으로 全国社会福祉協議会, 「居宅寝たきり老人実態調査報告書」, 1968; 内閣総理大臣官房, 「老後の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 1969; 東京都社会福祉協議会, 「一人ぐらし老人の生活実態調査報告」, 1971 등.

14 1970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7.1%를 기록하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15 ‘노인 붐’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노인의료비의 전면적 무료화가 실시된 1973년을 전후로 노인문제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사회적 분위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973년을 가리켜 ‘복지원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어, 고령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정점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고독사’라는 이름을 내건 최초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1973년이었으며, 이 조사결과는 이듬해인 1974년 ‘고독사 노인 추적조사 보고서’¹⁶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고독한 노인의 죽음’이 복지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는 이러한 흐름은, 초기의 고독사 담론이 ‘국가/행정당국’을 대응의 주체로 하는, 복지/제도 담론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초기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다음의 기사가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듯이 ‘관계성’에 대한 측면을 문제시하는 이야기 방식이었다.

(전략)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시(尼崎市)의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41세 여성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사후 약 80일, 시신은 미이라 상태가 되어 있었다. (중략) 이웃 사람들은 “전부터 거의 얼굴조차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중략) 직장 동료들도 그녀의 부재에 대해 무관심했다. (중략)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만, 일단 직장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이는 현대관리사회의 뒤틀린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후략).¹⁷(생략은 필자)

위의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에서 ‘고독사’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미디어를 통해 언급되기 시작된 1970년대 초반부터, 고독사 담론은 현대사회의 희박해진 인간관계 문제와 결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16 全国社会福祉協議会·全国民生委員児童委員協議会 編, 『孤独死老人追跡調査報告書』, 1974. 이 보고서는 1972년에 사망한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9개의 현과 1개의 도시 대상)에 대한 민생위원의 추적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17 「孤独な死者」, 『朝日新聞』 1973. 2. 7.

‘도시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1970년대의 고독사 관련 기사들¹⁸은 때때로 제도적 해결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¹⁹ 현대 사회가 낳은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관계의 상실이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고독사와 관련한 신문 기사 분석을 수행한 호리는 이러한 1970년대 고독사 기사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동안 지역 내에서 일어난 죽음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주위의 관심 및 관계의 희박함에 대한 ‘놀라움’”²⁰을 읽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움’이 ‘죽은 당사자’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죽음의 주변’에 대한 놀라움, 변해 버린 관계성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에 중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일본의 고독사 담론의 중심이 커뮤니티 담론으로 기울어지는 커다란 흐름의 막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995년 한신대지진 시기: 가설주택(仮設住宅)에서의 고독사

일본의 고독사 담론에 있어서 커뮤니티 담론은 1995년에 일어난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게 된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지진 이후 재해 피해자들의 거주공간으로서 건설된 가설주택에서 발생한 일련의 ‘죽음’은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면서 주목을 끌게 된다. 2000년까지 집계된 가설주택에서의 고독사 수는 233명으로 보고되고 있지만,²¹ 당시 가설주택에서 활동한 의료 종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식 집계

18 『『囲まれた空間』の孤独な死』, 『朝日新聞』 1972. 1. 5.; 『また孤独な『都会の死』』, 『朝日新聞』 1972. 1. 6.; 『孤独な死者』, 『朝日新聞』 1973. 2. 7.; 『東京一人暮らし 無残な死の周辺』, 『朝日新聞』 1977. 2. 7. 등.

19 예를 들어 위에 인용한 기사의 경우에도 생략된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접촉이라는 방법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었다.

20 堀崇樹, 『新聞報道にみる孤独死の動向と問題の所在』, 49쪽.

21 『阪神大震災の仮設住宅孤独死233人』, 『朝日新聞』 2000. 1. 14. 이러한 고독사 수치를 정확한 ‘고독사 통계’로 위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존재하지만, 가설주택이 지니는 명확한 시/공간적 성격은 일본에서 고독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상으로서 주목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의 다소에 대한 의미보다는 ‘수치화’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보다 컸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고독사’로 간주되는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실제로는 보다 많은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² 가설주택(이후 부흥주택)에서 일어난 (대량의) 고독사 현상은, 재해로 인해 가족 및 직장을 잃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르게 된 죽음으로 빈번하게 이야기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고독사 문제는 ‘커뮤니티의 소실’이라는 담론을 주축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고독사를 둘러싼 담론의 전개가 커뮤니티 담론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가설주택 거주자들의 고독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나 행정당국(효고현, 고베시)이라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이웃이나 지역의 자치조직에 대한 응답 수는 매우 낮게 드러나고 있었다.²³

또한 고독사가 이야기될 때 ‘정치의 빈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재해지에서 발생한 고독사를 ‘인재’(人災)로 간주하며 그 책임 소재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²⁴ 고독사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정치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러한 논조는 한신대지진 이후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데 있어서 명확한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²⁵ 그와 더불어, 재해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독사’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현상에 대한 적지 않은 보고들은,²⁶ 이것이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나 빈곤 등 보다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제이며, 국가적/제도적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삶의 방식의 다양화에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²⁷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이처럼 복지/제

22 예를 들어, 사망하기 전에 발견되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나, 사고사, 자살 등은 고독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자택 밖에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점을 무시한다면 고독사라 불리는 죽음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23 「座談会『被災者に必要な支援とは』阪神大震災2年特集」, 『朝日新聞』1997. 1. 16.

24 「被災者の孤独死にみる政治の貧困さ」, 『朝日新聞』1997. 1. 23.

25 中森弘樹, 「孤独死の言説からみる死の自己決定の変容: 新聞の投書記事分析」, 186~187쪽.

26 「阪神大震災の孤独死」, 『朝日新聞』1998. 4. 7.

27 「孤独死 福祉に距離を感じ消えゆく命」, 『朝日新聞』1996. 12. 28.

도에 관한 고독사 담론은 한신대지진 시기에 분명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고독사 담론이 주로 ‘재해지의 가설주택(내지는 이후의 부흥주택)’ 내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고독사 담론이 커뮤니티의 문제를 중심 축으로 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5년, 지진 발생 후에 재해지에서 이루어진 가설주택 건설은, 재해의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²⁸ 그 결과, 가설주택 입주자는 주로 추첨에 의해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그동안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가설주택을 통해 조성된 이러한 환경은 기존의 커뮤니티가 해체되어, 재해 피해자들이 이제까지 가깝게 지냈던 인간관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커뮤니티의 소실/부재라는 상황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 미디어 등은 ‘고독사’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다루고 있었으며,²⁹ 그로 인해 커뮤니티 붕괴와 고독사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일상화되었다. 재해지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재해로 직장 및 지역 커뮤니티 등 사회와의 접점을 잃어버린 사람의 죽음으로서 고독사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압도적인 수로 재해지의 고독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커뮤니티 상실=고독사’라는 도식에 ‘재해’라는 문맥까지도 결합시켜, 이러한 도식이 재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³⁰

28 당시 건설된 응급가설주택은 4만 8,300호로, 전부 완성되기까지 재해 발생으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神戸新聞社, 『阪神・淡路大震災10年全記録:被災地は復興したか』, 神戸新聞総合出版センター, 2004).

29 額田勲, 『孤独死:被災地神戸で考える人間の復興』, 岩波書店, 1999, 46~47쪽.

30 이는 2004년의 니가타현(新潟県) 주에쓰(中越) 지진과 2007년의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 및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 대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가설주택에 촌락 단위로 입주시키는 등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재해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峯本佳世子, 『被災地における高齢者の孤独死防止と生活支援』, 『大阪人間科学大学紀要』)

이처럼 1995년 한신대지진이 야기한 상황 속에서 고독사는, 한편으로 질병의 진행과 악화, 궁핍한 생활(빈곤, 사회적(그리고 심리적) 고립이 악성 사이클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사태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고독사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려 하는 관점이 존재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복지/제도 담론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재해 이후 눈에 띄게 된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가 고독사로 이어졌다’라는 논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담론이 고독사 대응에 있어서도 밑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다.

3) 2000년대 이후[‘기타큐슈시(北九州市) 고독사 사건’과 ‘단지의 고독사’]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고독사 담론 전개가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전까지 그 존재가 희미했던 개인화 담론이 하나의 유형을 이루며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는 혼자인 것으로, 그 순간 고독을 느낄지 아닐지는 타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개인화 담론은,³¹ 따라서 ‘고독’의 존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2010년 이후의 ‘슈카쓰’(終活)³² 및 ‘엔딩노트’ 등으로 이어지는 자기책임론적인 담론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화 담론은 ‘고독사’라는 말에 따라다니는 부

9号, 2010, 171~177쪽).

31 예를 들어, 2007년 1월 26일자 아사히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방식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은 본래, 죽음을 맞이할 시기도 죽는 방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고독’하다고 느낄지 아닐지는 주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고독’을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누구나 ‘고독’하다. 사후 며칠이나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보도만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인생 전체를 불쌍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声)誰もが『孤独』,心はさまざま」,『朝日新聞』2007. 1. 26.)

32 삶의 마지막(終わり)을 위한 활동(活動)을 의미하는 줄임말로, 인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자신의 신변 정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대체로 재산 상속의 계획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례 및 묘지의 준비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슈카쓰의 유형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처리까지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론’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정적인 인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주장하는 형태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고독사’ 대신 ‘자연사’, ‘평온사’, ‘자립사’ 등을 제안하는 이야기 방식은 이러한 형태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³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고독’을 한층 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대한 불안 및 슬픔에 대해 개인이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인화 담론 또한 고독사와 관련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 등장하고 있었다.³⁴ 하지만, 신문기사들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 방식이 표출되는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 독자 투고 기사라는 형태로, 즉 외부의 시선으로 이야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의 이러한 개인화 담론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2000년대 일본에 있어서 고독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기타큐슈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고독사 사건이었다.³⁵ 이는 특히 담론의 영역에 있어서 복지/제도 담론이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어난 이 사건들은 복지사무소 창구에서 생활보호 신청을 거절하는, 이른바 ‘물가작전’(水際作戦)³⁶ 등의 복지행정

33 「(声)『孤独死』とは呼ばないで」, 『朝日新聞』 2013. 1. 11.; 「(声)『孤独死』を改め『自立死』に」, 『朝日新聞』 2013. 2. 3.; 「(声)独居は必ずしも孤独でない」, 『朝日新聞』 2013. 4. 10. 등.

34 예를 들어, 2012년 4월 6일자 독자투고 기사를 보면, 자신의 동생이 ‘고독사’ 한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고독사는 반드시 가족이나 행정의 책임만으로 잘라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声)弟が『孤独死』, 悲しく悔しい」, 『朝日新聞』 2012. 4. 6.).

35 예를 들어 아사히신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독사 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을 보이는 것은 2007년이었다. 이는 2005년에서 2007년에 걸쳐 발생한 기타큐슈시의 고독사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기타큐슈시 고독사’ 관련 기사는 총 34건이었는데, 이 중 25건이 2007년에 집중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큐슈시 고독사사건’이라는 것은 기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八幡東区)(2005년 1월 7일), 모지구(門司区)(2006년 5월 23일), 고쿠라키타구(小倉北区)(2007년 7월 10일)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을 가리킨다. 이들 사건은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면서, 복지 행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기타큐슈시 아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福田義也, 『福祉社会学の挑戦: 貧困・介護・癒しから考える』, 岩波書店, 2013 등의 논의를 참조해 볼 수 있다.

36 ‘물가작전’(水際作戦)은 원래 군사용어로서, 해상으로 침입하는 적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상륙 전에 대응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이 용어가 복지행정과 관련해 사용될 때에는, 생활보호(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신청을 하기 위해 복지행정기관의 창구를 찾은 사람에게 대해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창구에서 돌려보내는 행태를 의미한다. 즉, 일본의 생활보호 신청 행정은 원칙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신청을 모두 수리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급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

문제를 표면화시킨 사건이었다. 즉,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행정당국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미디어 등도 그러한 논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고독사’라는 말과 함께 ‘행정의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 등이 적극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행정에 의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등 고독사 담론은 철저히 제도와 행정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³⁷ 즉, 기타큐슈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 행정에 대한 재검토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 서비스의 충실화 및 경제적 빈곤에 대한 공적 안전망의 구축”³⁸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복지/제도에 관한 고독사 담론이 전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중심적인 담론의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였다. 즉, 2000년대 일본의 고독사 담론에 있어서 보다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던 ‘단지의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담론의 그늘에 가려져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쓰미야 아시타(松宮朝)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단지의 고독사’에 관한 담론에 의해서 기타큐슈시 고독사 사건을 통해 제시된 “경제적 빈곤의 시점이 희미해짐과 동시에 ‘관계성의 빈곤’이 클로즈업되어, ‘관계성의 재구축’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해”³⁹졌던 것이다.

한신대지진의 피해 지역에 세워진 가설주택이 철거된 2000년을 기점으로, 피해 복구의 상황이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가설주택에서의 고독사’라는 ‘문제’도 또한 그 실재성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가설주택에서의 고독사’를 대신해 고독사에 ‘문제로서의 실재성’을 부여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

당국의 의도 아래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시되었으며, ‘물가작전’은 이러한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37 「(声)男性の孤独死, 暗澹たる思い」, 『朝日新聞』 2006. 8. 5.; 「九州と沖縄対象に生活保護相談会きょう県内は大分市で」, 『朝日新聞』 2015. 5. 25.
- 38 松宮朝, 「高齢者の『関係性の貧困』と『孤独死』・『孤立死』: 愛知県愛西市の事例から」, 『日本都市社会学年報』 30号, 2012, 17쪽.
- 39 松宮朝, 「高齢者の『関係性の貧困』と『孤独死』・『孤立死』: 愛知県愛西市の事例から」, 17쪽.

터 부각되기 시작한 ‘단지에서의 고독사’였다. 물론, 일본에서 고독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다시금 증가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이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명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나, 2005년 이후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증가 경향 등과의 관련도, 그 배경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2005년 NHK를 통해 방영된 「홀로 단지의 방 한 구석에서」(一人団地の一室で)라는 방송이 지바현(千葉県) 도키와다이라 단지(常盤平団地)의 ‘고독사’를 다루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등⁴⁰ ‘단지의 고독사’가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로서 작용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지바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출현한 ‘단지의 고독사’ 담론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고독사 대응으로 부각되면서 고독사에 관한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노후화와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단지’는, 세계에서든 전례 없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단지의 고독사’는 단지를 넘어서 넓은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한신대지진 시기의 가설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한 담론이 일반인들에게 ‘나도 고독사 할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환기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독사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단지의 고독사’와 관련한 담론이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자신이 거주하는) 일상적인 공간인 ‘단지’에서 고독사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독사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40 佐々木・NHKスペシャル取材班, 『ひとり誰にも看取らず: 激増する孤独死とその防止策』, 阪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07.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 4개월간의 취재기간을 거쳐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NHK스페셜 「ひとり団地の一室で」(2005년 9월 24일 방영)는 9.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적 거리를 크게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단지의 고독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고독사 담론을 강화했다.

커뮤니티 담론은, 정책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어, 2007년 후생노동성의 고독사 대책에서는 지역사회의 재건이 최우선적인 내용으로 되었으며, 이는 그 이듬해 발표된 보고서 「고령자 등이 혼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은 2010년 NHK의 「무연사회: 무연사 3만 2천 명의 충격」이 방송된 이후 넘쳐나듯이 퍼져 나간 ‘무연사회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혈연(血緣), 지연(地緣), 사연(社緣)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무연사회론’은 하나의 유행이 되어 퍼져 나가면서⁴¹ 관계의 상실 및 사회적 유대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을 주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은 일본 국민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 및 결속력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폭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즈나’[絆, (유대)]라는 말은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회자되는 말이 되었으며,⁴² 이러한 ‘기즈나’의 부활에 대한 희

41 실제로 일본에서 ‘무연사회’라는 말은 ‘2010년신어·유행어대상’(2010年新語·流行語大賞) 톱10에 선정되었다. 일본의 고립 문제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 중 하나인 이시다 미쓰노리(石田光規)는 『고립의 사회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무연사회론의 유행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사회적 배제라는 기존의 논의가 ‘무연’이라는 ‘관계’의 문제로 얼굴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보다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시다는 무연사회의 유행과 관련한 사회적 배제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로서 ‘월경성(越境性)’을 지적하고 있는데, 즉 “무연사회의 유행은, 배제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특정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어닥칠 수 있는 문제로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石田光規, 『孤立の社会学: 無縁社会の処方箋』, 勁草書房, 2011, 8쪽)이다. 2000년대 일본의 ‘단지의 고독사’가 커뮤니티 담론과 결합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월경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설주책(특수한 상황)에서 ‘단지’라는 공간(보편적인 상황)으로 고독사 담론의 주된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누구나 ‘고독사’와 조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의 고양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42 일본에서 ‘기즈나’[絆]는 2011년 ‘올해의 한자’로 선정되었다.

망을 이야기하는 담론이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소비되면서 고독사와 관련한 커뮤니티 담론을 한층 더 강화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티 담론은 일본의 고독사 담론에 있어서 중심적 담론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일본의 고독사 현상의 전개를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는 복지/제도 담론 및 개인화 담론과 같이 커뮤니티 담론 이외의 형태를 취하는 이야기 방식 또한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고독사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시작되기 시작한 1970년대,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주목이 폭발하게 된 1990년대 중반의 한신대지진 시기, 그리고 기타큐슈시의 고독사 사건 등이 주목받았던 2000년대 중반 등은 고독사 담론이 커뮤니티 담론 이외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지니고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결국 다른 모든 형태의 담론을 누르고 고독사 담론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커뮤니티 담론이었으며, 적어도 고독사 담론의 영역에 있어서 커뮤니티 담론은 왕좌의 자리를 여전히 내어주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4. 고독사 정책 수립과 커뮤니티 담론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고독사와 관련한 커뮤니티 담론은 일본에서 고독사 관련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2007년 후생노동성에 의해 공식화된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⁴³의 결정적인

43 고독사를 명시적 대상으로 지칭하는 최초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명칭에는 ‘고독사’ 대신 ‘고립사’가 사용되고 있다. ‘고립사’라는 용어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개념 대신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일본의 행정 기관의 경우 ‘고독사’보다 ‘고립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립사’라는 용어의 사용이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한 엄밀한 구분에 기반해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공식 문헌 속에서도 ‘고독사’와 ‘고립사’가 혼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내각부에서 발간하는 『고령사회백서』를 보면, ‘고립사(고독사)’라는 형태로 병기되거나 ‘고독사’가 단독으로 표기되는 등 이 두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内閣府, 『平成22年版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고독사와 관련한 정책은, 고독사 담론이 등장하는 초기부터 고령자 복지 정책의 일부분으로 위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복지 대상으로서 ‘고독사’라는 명칭이 정책당국의 공식적인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⁴⁴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고독사 담론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단지의 고독사’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담론이었다. 실제로 2007년에 ‘고독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후생노동성의 정책이 수립될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관련해서 2000년대 중반에 주목을 끌게 된 ‘단지의 고독사’의 대표적 주체라 할 수 있는 도키와다이이라 단지 자치회였다. 즉, 2006년 8월에 도키와다이이라 단지 자치회와 단지 지구사회 복지협의회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을 상대로 이루어진 진정(陳情)활동은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의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었다. 자치회에 의해 이루어진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⁴⁵

1. 고독사에 대한 실태에 기반해, 지역에서 협력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
2.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해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는 독거 고령자를 파악할 것과 이에 대한 지원
3. 고립된 생활을 하는 고령자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일본 후생노동성은 위의 진정활동에 대한 대답으로서, 총무성 및 국토교통성 등과 연계해서 고독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일

高齢社会白書』, 2010: 『平成29年版 高齢社会白書』, 2017 등).

44 社会的な援護を要する人々に対する社会福祉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社会的な援護を要する人々に対する社会福祉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2000, 3쪽.

45 黒岩亮子, 『「孤独死」問題をめぐる『つながり』の再構築: 地域福祉における人間関係』, 高橋勇悦 外 編, 『現代日本の人間関係: 団塊ジュニアからのアプローチ』, 学文社, 2007, 122~124쪽.

명 ‘고립사 제로 프로젝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2007년도 고령자 복지 예산(안) 안에 1억 7,295만 엔을 책정하였다. 즉 ‘고독사’를 명시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을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에 ‘전국개호보험/고령자보건복지 담당과장회의(担当課長會議)’를 통해 ‘고령자가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고립사’ 제로를 지향하며)’를 발족시켰다(이하 ‘추진회의’로 표기). 이 ‘추진회의’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차례에 걸친 회의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7년 8월 28일에 열린 제1회 ‘추진회의’는 관계 시책의 현황에 관한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제1회 ‘추진회의’에서 후생노동성은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의 목적으로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으로부터 고립된 고령자 및 단신 고령자의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령자의 고립사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국가, 지방자치체 등이 주체가 되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⁴⁶ 이와 더불어, ① 추진회의의 설치, ② ‘고립사 제로 시범사업’의 추진을 사업 내용으로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후생노동성을 시작으로, 총무성, 국토교통성, 경찰청, 신주쿠구, UR도시기구,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연합회,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기반해, 각 주체가 관련해 왔던 시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논의에는 이들 주체들 이외에도 일본 NPO센터, 일본개호지원전문가협회, 전국노인클럽연합회, 고층주택관리업협회, 전국자치연합회의 관계자 및 의료, 건축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추진회의’의 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있었다.

2007년 12월 11일에 열린 제2회 ‘추진회의’는, ‘구체적 시행 사례에 관

46 厚生労働省, 「第1回 高齢者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孤立死』ゼロを目指して)」(会議資料: 平成19年8月28日), 2007, 資料1-①.

한 사정 청취'와 의견 교환 등을 의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회의에는 지바현 도키와다이이라 단지의 자치회장(당시)인 나카자와 다쿠미(中沢卓実)가 참가하여, 도키와다이이라 단지의 독자적인 고독사 대책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도키와다이이라 단지 이외에도 아이사이시(愛西市), 기후현 히다시(岐阜県飛騨市), 미에현 구마노시(三重県熊野市),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岡山県美作市)의 '고독사 제로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가 후생노동성에 의해 보고되었다.⁴⁷

2008년 2월 19일에 열린 제3회 '추진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추진회의'의 제언을 종합하기 위한 논점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⁴⁸ 이를 바탕으로 2008년 3월 18일의 제4회 '추진회의'에서는 '추진회의'의 최종보고서안이 제출되어, 그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⁴⁹

이상의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리된 최종보고서는, 고독사를 인간의 존엄에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비참한 '고립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로움' 속으로 침잠한 혼자사는 '고독'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 관계 및 인간관계를 구축해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저하된 커뮤니티 의식을 다시금 찾아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⁰ 이 최종보고서는, '고립사' 예방형 커뮤니티 만들기를 제안하면서, ① '고독'의 해소와 고감도 커뮤니티/기동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제시함과 동시에, ② '고립사' 제로 작전과 고령자 학대 및 인지증(치매) 대책, 나아가 재해예방대책을 일

47 厚生労働省, 「第2回 高齢者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孤立死』ゼロを目指して)」(会議資料: 平成19年12月11日), 2007.

48 厚生労働省, 「第3回 高齢者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孤立死』ゼロを目指して)」(会議資料: 平成20年2月19日), 2008.

49 厚生労働省, 「第4回 高齢者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孤立死』ゼロを目指して)」(会議資料: 平成20年3月18日), 2008.

50 厚生労働省, 「高齢者等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報告書」, 2008, 11쪽.

체화하여 생각할 것과, ③ ‘고립사’ 방지 네트워크의 다양한 수단 및 지킴이(見守り) 시스템의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었다.⁵¹

당시 정책 수립 과정 속에서 검토된 시책 및 정책 수립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구체적 시책들에 대한 기나긴 목록들은, 실태 파악과 계몽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제외하면, 주로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안부확인(및 긴급연락) 시스템의 구축과 고독사 위험군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관계형성의 장을 만드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⁵²

즉, 후생노동성의 고독사 정책은 지역과 커뮤니티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독사 관련 정책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방향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고독사 문제가, 희박해진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의 약화(내지는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재구축에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는 담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5. 커뮤니티 담론에 대한 재고: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

이 장에서는 앞에서 후생노동성의 정책이 실제로 수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언급했던, 일본 지바현에 위치한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이야기는 2000년대 일본에서 ‘단지’에서의 고독사가 주목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자 핵심적인 위치를

51 厚生労働省, 「高齢者等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報告書」, 2008, 12~19쪽.

52 예를 들어 厚生労働省, 「高齢者等が一人でも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推進会議報告書」 32~37쪽 및 厚生労働省, 「孤立死防止対策取組事例一覧」, 2013에 소개되고 있는 ‘고립사 방지 정책 현황’에 대한 279개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고독사 대응 전략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성공 모델로 간주되었고, 다양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확산되었다. 도키와다이라 단지는 단지의 고독사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에 중점이 놓여 있는 고독사 담론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 이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이후 정부 정책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단지는 후생노동성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하나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로 간주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 수립 당시의 도키와다이라 단지 이야기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당시의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이야기 속에 어떠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고독사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내포하는 한계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발신의 중심지’로서의 도키와다이라 단지

도키와다이라 단지는, 단지 탄생 이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거치면서 (다른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모된 것이 사실이다. 단지의 첫 입주가 시작된 해인 1960년의 『경제백서』에 등장한 ‘단지족’(団地族)⁵³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듯이, 이 단지 또한 비교적 수입이 높고 젊은 가족들이 입주자의 주를 이루면서⁵⁴ 주위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거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화와 노후화를 겪게 된 결과, 2000년대에 들어선 시점의 도키와다이라 단지는 고령자 및 단독세대의 증가,⁵⁵ 그리고

53 일본의 1960년도 경제백서에서는 ‘단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대주의 연령이 젊고, 소가족이며 맞벌이의 경우가 많으며, 연령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일류기업이나 관공서에 등에 근무하는 인텔리, 셀러리맨’.

54 입주 초기 신청자(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20~30대(20대 43%, 30대 42%)였으며, 당초의 임대료 5,500엔(2DK기준)의 5.5배라는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신청이 가능했다(당시 대출 초입 월급은 14,000엔)(高尾公矢, 『孤独死の社会学: 千葉県常盤平団地の事例をてがかりとして』, 29쪽).

55 2007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고령화율은 29.2%로 같은 해 마쓰도시 전체 고령화율 17.6%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1인가구의 비율이 약 27.9%에 달하고 있었다(高尾公矢,

생활보호세대 등의 생활약자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고독사 현상의 발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독사와 관련하여 도키와다이라 단지가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이 단지가 고독사와 관련한 정보 및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발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했다는 데에 있다.

도키와다이라 단지가 고독사 문제에 힘을 쏟게 된 발단은 2001년(사후 3년 경과 후 발견)과 2002년(사후 4개월 경과 후 발견)에 단지 내에서 발생한 두 건의 고독사였다. 집합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 애써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고 터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키와다이라 단지가 취한 대응은 오히려 고독사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다. 단지의 자치회장인 나카자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맨션이나 단지의 경우에는 주위의 평판이나 주택가치 등을 신경 쓴 나머지(고독사를) 공론화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고독사’ 문제를 단지주민에게 던져 보기로 하였습니다. ‘단지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단지주민 모두가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공유하도록 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⁵⁶

즉, 단지 자치회를 중심으로 고독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널리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정보 발신의 중심지 역할을 자청했던 것이다.

2002년 고독사가 발생한 3개월 뒤(2002년 7월 17일) 개최된 ‘제1회 ‘고독사’를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고독사 문제에 대한 발신의 장이 만들어졌으며, 자치회장인 나카자와를 중심으로 한 강연, 인터뷰 및 서적 간행 등을 통해 일반 시민 및 각종 미디어로의 노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보 발신 활동은 행정 측을 향해서도 강하게 이루어

『孤独死の社会学: 千葉県常盤平団地の事例をてがかりとして』, 29~30쪽).

56 中沢卓実, 『常盤平発信 孤独死ゼロ作戦: 生きかたは選べる』, 木の泉社, 2008, 14쪽.



〈그림 1〉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마쓰도 고독사 예방센터'와
 (전)단지 자치회장 나카자와 다쿠미 씨
 출처: <https://www.tyojyu.or.jp/net/kaigo-seido/jirei/kodokushizerosakusen.html>.

졌다. 특히 2002년 마쓰도시에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한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2004년 고독사 데이터 공표를 이끌어 낸 일이나,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한 진정활동, 2007년 후생노동성에서 이루어진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고독사 대응 활동에 대한 사례보고⁵⁷ 등은 일본의 현이나 중앙정부가 고독사 문제에 착목하는 계기를 제공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고독사 대응은 2006년 '마쓰도시 지역복지계획' 및 '지바현 고령자 보건복지계획(2006~2008년도)' 속에 소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2007년 후생노동성의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의 하나의 모델로서 참조되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예방형 커뮤니티 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는 후생노동성의 2008년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⁵⁸ 정

57 中沢卓実, 「常盤平団地が『孤独死ゼロ作戦』に挑む」, 中沢卓実・淑徳大学孤独死研究会 編, 『団地と孤独死』, 中央法規, 2008, 33쪽.

58 더불어, 2008년도에는 사전(『広辞苑』第六版)에 '고독사'가 기재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현대국어 기

보 발신 활동을 포함해, ‘고독사 110번’이라는 긴급통보시스템, 안심등록카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킴이 테세 구축과 ‘인사 운동’, ‘이키이키 살롱’ 등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후생노동성의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의 주요 내용들 모두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지킴이 활동이나 이키이키살롱과 같은 커뮤니티 강화와 관련한 활동 등 도키와다이아 단지에서 이루어진 고독사 대응 방식은, 사실 이전부터 도키와다이아 단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던 것이기에, 이 단지만의 독특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⁵⁹ 따라서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대응이 하나의 성공적인 스토리로서 간주되는 현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대응 프로그램보다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주체 및 객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2) 도키와다이아 단지 사례의 내재적 특징

도키와다이아 단지 고독사 대응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체인, 단지자치회, 지구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자치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회 활동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나카자와 다쿠미라는 인물이다. 자치회 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크게 발휘해 온 나카자와 자치회장이 없었더라면 고독사 제로작전을 포함해, 현재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그 어떤 활동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가 없었다면 그 모든 활동들이 ‘진짜로’

초지식』(現代用語の基礎知識) 2008년도판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항목에는 도키와다이아 단지 주민의 ‘고독사 제로 작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中沢卓実, 「常盤平団地が『孤独死ゼロ作戦』に挑む」, 38쪽).

59 예를 들어, 후레아이-이키이키살롱(ふれあい・いきいきサロン)은 1994년 일본의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안하여 1996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이미 2001년에 전국적으로 그 수가 1만 9,647개소에 달하고 있었다(黒岩亮子, 「高齢者の『孤立』に対応する福祉政策の変遷」, 『社会福祉』 49号, 2008, 75쪽).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도키와다이이라 단지의 성공에는 어떤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고 자의적인 요소의 존재가 그 핵심을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키와다이이라 단지 자치회는 첫 입주 2년 후인 1962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나카자와는 자치회 초기멤버로서 활동하기 시작해, 1978년 자치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7년까지⁶⁰ 자치회장 경력만 30년 이상인, 말 그대로 도키와다이이라 단지 자치회의 산증인이자 상징적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회 활동의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자치회보 『도키와다이이라』는, 1962년 6월에 간행(월1회)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⁶¹ 이 또한 ‘나카자와의’, ‘나카자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카자와는 1984년 54세로 퇴직할 때까지 산케이신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 이후에는 후나바시시(船橋市)의 타운지 『월간my 후나바시』의 편집장으로 근무하였다. 자치회보의 지속적 간행의 배경에는 나카자와의 이러한 직업적 경력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치회보 『도키와다이이라』의 대다수의 지면은 나카자와 본인이 작성한 기사로 채워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⁶²

고독사 대응에 관련한, 대학 등을 필두로 한 전국에 걸친 강연활동, 각종 미디어와의 인터뷰, 저술활동, 진정활동, 사례보고 등 그 모든 활동도 또한 나카자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나카자와뿐만 아니라 5~6명의 핵심 멤버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모두 초기입주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활동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는 분명 ‘자치회장’이라는 직분에 요구되는 것 이상인 것이다. 나카자와 개인에 대한 의존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60 나카자와 다쿠미는 2017년 11월에 자치회장을 퇴임한 이후 2018년 단지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단지 자치회의 특별 고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61 도키와다이이라 단지의 자치회는 2009년에 일본 총무대신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커뮤니티/지역 재생에 대한 단지 자치회보의 공헌은 단지의 ‘고독사제로 작전’ 및 ‘이키이키 살롱’과 더불어 수상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清水美恵子, 「常盤平団地自治会の地域ぐるみの取り組み: 孤独死ゼロ作戦, 『住民と自治』 646号, 2017, 25쪽).

62 전체의 80%에 이르는 기사를 나카자와가 집필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다.

‘고독사110번’이라는 긴급통보시스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상당한 수준의 사적 프라이버시의 희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독사110번’의 연락망에 있어서 1차적인 연락 번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자치회사무실이나 UR(도시재생기구), 경찰서 등이 아니라 자치회장의 개인 연락처였다. 여기에는 나카자와의 근무지인 『월간my 후나바시』의 편집실 번호는 물론 야간을 위한 개인 자택번호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인적 요소에 대한 강한 의지 및 개인적인 희생의 불가피한 수반은 자치회와 지구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회의 일체화라는 방식 속에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과제 공유 및 공통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나카자와가 전면에서 내세운 방식은 각 행동주체들이 복수의 역할을 겸임하는 것이었다. 자치회장은 지구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국장을, 자치회의 다른 임원들도 지구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를 겸임하였으며, 지구사회복지협의회장은 단지민생위원회장 및 자치회 부회장을, 고독사에방센터 소장은 민생위원 및 단지자치회 임원을, 민생위원/아동위원들도 자치회 임원 등을 겸임할 것이 요구되었다.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로 동일 인물들이 복수의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상황을 엄밀히 말해 연계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방식에 의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의 자치회 활동은 자치회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다. 물론 그런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겠지만, 고령화 및 개인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는 낙관적인 미래를 예상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34년생인 나카자와가 80대를 넘긴 이후에도 자치회장으로서 자치회보의 많은 지면을 집필하면서 다수의 활동을 이어 가야만 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지구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었던 오시마(大嶋愛子)도 단지자치회의 부회장으로서 자치회의 복지부뿐만 아니라 생활부가

지 담당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탁월한 능력 및 열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만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고령에 이른 이들이 계속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열정적이고 높은 집행력을 겸비한 인물의 존재는 분명 고독사와 관련한 대응 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메리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인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성공스토리에 대한 요인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지역주민 전체의 고양된 집합의식의 존재가 없다면 단지 특정의 개인적 카리스마 등에 의해 활동의 성공이 담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도키와다이라 단지는 자신들의 특별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구공단주택(旧公団住宅)이 대체로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형태였던 것에 비해 도키와다이라 단지는 모든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지 초기의 입주자들에게서 보이는 계층적 특징에 더해, 주민의 공통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일종의 동질적인 토양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및 노후화가 진행되고 주민 구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주민들에게 강한 집합의식이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투쟁과 재건축반대운동 등의 집단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

일명 임대료재판(家賃裁判)과 복지재판(福祉裁判)으로 불리는 임대료 인상 반대 투쟁 이전에도 공단 및 마쓰도시에 대항하는 자치회의 활동은 꽤 오랜 내력을 지니는 것이었으나, 1988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소송투쟁은 ‘재판’이라는 방식을 통해 주민의 결속 및 조직화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임대료재판’은 나카자와가 10년 만에 다시 자치회장으로 취임한 1988년 12월, 나카자와를 포함한 4인의 단지 주민이 임대료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주민소송의 형태로 전개된 임대료 인상 반대운동으로, 1989년 2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거의 4년에 이르는 싸움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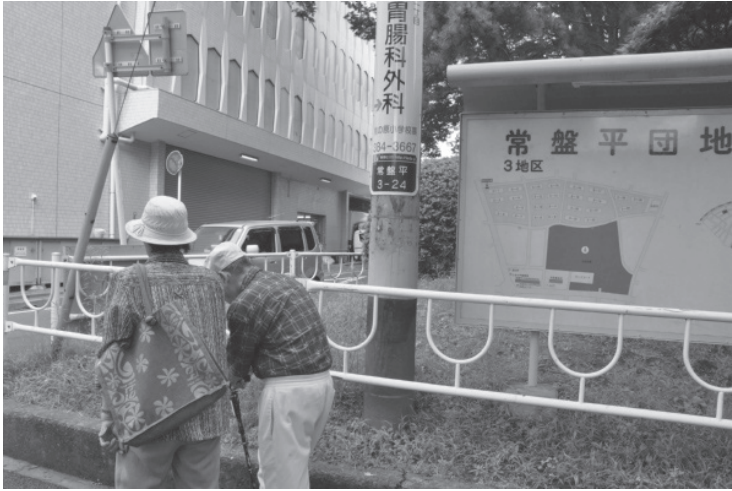
이 재판은 1992년 9월에 내려진 판결에 의해 자치회의 패소가 결정되었지만, 자치회는 1991년 노령/저소득자 등의 실태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공단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단지생활권’을 주장하며 다시금 소송을 제기(나카자와 외 6인)하였다. 이른바 ‘복지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이 소송이 1997년 2심판결에 의해 다시금 자치회 측의 패소로 끝날 때까지, 장기간에 걸친 주민소송 운동이 계속되었다. 임대료재판과 복지재판은, 결과적으로 자치회의 패소로 끝나긴 했지만, 이들 소송과정에서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자치회에 의해 단지 주민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단지 커뮤니티 강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7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도키와다이아 단지 재건축반대운동은 앞선 소송들과는 달리, 최종적으로 단지자치회의 전면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었다. 마쓰도시의 1996년도 ‘마쓰도 종합계획’ 및 1997년도 ‘마쓰도 주택 마스터플랜’에 드러난 재건축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시작된 이 운동은 ‘빈집 문제’(空き家問題)⁶³와 맞물려 서명운동, 공개질의, 다른 단지와 연계한 시위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2000년 3월 13일 자치회와 공단 측의 각서 조인이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되었다. 결과적으로 ‘빈집’에 대한 신규모집이 재개되고, 재건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결정되었다. 특히 재건축에 의해 기존의 인간관계가 약화된 단지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⁶⁴ 재건축의 저지는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강한 결속력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도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집단적 경험을 통해 길러진 주민 간의 긴밀한 집합의식과

63 재건축의 준비작업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집(空き家)에 대한 신규모집을 중단한 것에 대해 나카자와 자치회장은, 이러한 공단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空き家損失補填」을 청구(1,900만 엔)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大山真人, 『団地が死んでいく』, 平凡社, 2008, 74~75쪽).

64 대표적인 예로서 재건축된 도에이토야마 단지(都営戸山団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림 2〉 '고독사 제로 작전'으로 유명한 일본 지바현 마쓰도시의 도키와다이아 단지
출처: <https://tanakaryusaku.jp/2010/08/00091>.

네트워크는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고독사 제로 작전'으로 이어져, 그 핵심적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었다.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고독사 대응 전략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된 요인에는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질적이고 인격적 관계로 뭉친 강력한 행위주체,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강한 유대감을 지닌 집단의 존재가 그 핵심에 놓여 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도키와다이아 단지 이야기를 통해 읽어 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드러나는 커뮤니티의 보편적인 특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커뮤니티에 있어 나카자와 자치회장과 같은 인물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도키와다이아 단지와 같은 집단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또한 결코 일반적이라 할 수 없다.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한 성공스토리를 원하는 커뮤니티 담론에 있어서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스토리는 매우 좋은 먹잇감으로 보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지의 스토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한 매우 '특수한' 사례이며, 그러한 '특수한 성공'은 오히려 '일반적인 실패'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도키와다이라 단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커뮤니티 담론이 지니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지의 스토리는 자신의 사적 프라이버시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며 행위하는 강력한 인적 요소 및 강한 연대를 지닌 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실천적 활동의 성공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는 커뮤니티 담론이 도키와다이라와 같은 ‘특수한’ 스토리와 결합되는 경우 흔히 드러나는 논리적인 모순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은 ‘일반적인’ 대상에 적용될 경우 그러한 ‘특수성’의 부재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실천적으로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일본 고령자 복지 정책의 방향성

‘고립사 방지 추진사업’의 실시는, 2008년도 『고령사회백서』의 ‘건강/복지’의 한 분야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후 『고령사회백서』에는 지속적으로 ‘고독사’(고립사)가 언급된다. 즉 고독사는 고령자 복지의 하나의 독자적인 항목으로서 명시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2008년 ‘추진회의’의 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고독사 정책은 ‘커뮤니티 만들기’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역 복지’라는 키워드를 부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추진회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된 ‘앞으로의 지역복지의 모습에 관한 연구회’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시기(2008년 3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고립을 막기 위한 커뮤니티 만들기’라는, ‘추진회의’의 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⁵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 이후의 주요 정책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선

65 厚生労働省, 「これからの地域福祉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2008.

2008년에 보조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역복지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역복지 활동의 조정과 관련한 전임 담당자를 시정촌에 설치하고, 더불어 모임(ふれあい)의 거점 만들기, 지킴이 활동 등의 네트워크 활동, 케이스 지원 조정 회의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비참한 고령사, 학대 등을 하나의 사례도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⁶⁶한다는 목표 아래 2009년부터 3년간 ‘안심생활창조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전국 58개 지역의 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사업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 장애인, 고령자 및 장애인 부부 세대 등,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지킴이 활동, 장보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⁶⁷

‘안심생활창조사업’에 이어서 이루어진 정책 활동으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서로 돕는 지역체제 만들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주민 조직, NPO, 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킴이 활동팀 등의 인재 양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정비, 선진적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일본의 고독사 관련 복지 정책들이 지역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과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복지의 주체로서 이들 요소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방향은 고령자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복지 정책(나아가서는 복지 정책 일반)의 주요한 방향성으로서 2022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⁶⁸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이 제도는 일본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6 厚生労働省, 「安心生活創造事業」,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anshin-seikatu/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 11. 15.).

67 厚生労働省, 「見直しませんか 支援のあり方・あなたのまち: 安心生活を創造するための孤立防止と基盤支援(安心生活創造事業成果報告書)」, 2012.

68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 사고 중 하나로서 2022년도판 고령사회백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령기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만든다.”(内閣府, 『令和4年版 高齢社会白書』, 2022, 67쪽)

데, 2007년 고립사 방지 추진 사업이 담고 있는 커뮤니티 지향적인 주요 시책들은 실제로 개호 예방 사업의 일부로서 개호보험제도 속에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커뮤니티 담론은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동원되고 있지만, 이때 동원되는 커뮤니티 담론은 앞서 살펴본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그 정당성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시책들은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의 대부분이 지극히 ‘커뮤니티적’인 것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기 쉽다.

도키와다이아 단지가 보여 주는 ‘고독사 제로작전’과 같은 대응은 커뮤니티적 해법의 모범답안과 같은 존재로서 이야기되어 왔다. 그리고 실제로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활동들은 2007년 후생노동성의 정책 수립에, 글자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자치회 가입률 감소와 자치회 임원의 고령화로 상징되는 지역커뮤니티의 현 상황 속에서, 도키와다이아 단지의 자치회와 같은 모습을 보편적인 것으로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있으며, 더구나 나카자와 자치회장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의 존재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도키와다이아 단지와 같은 특수한 집단 경험을 보유하는 커뮤니티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특정한 정책에 의해 쉽사리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즉 커뮤니티 담론에 동원되는 사례들은 오히려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담론이 정책과 결부될 경우, 담론의 취약성은 단순히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즉 그 경우 담론이 지니는 문제성은 구체적 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등장한 커뮤니티 담론인 ‘무연사회론’에 대한 분석에서 이시다는 이 담론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은폐하고 문제의 본질을 인간관계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버린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논리전개가 ‘자기책임론’을 조

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⁶⁹ 그리고 일본의 고령자 복지 제도의 전개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개호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실시 이후 거듭되는 개정 과정을 통해 일관적으로 ‘지역 포괄 케어’와 더불어 ‘개호 예방’이라는 방향성을 강화해 왔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개호 예방’ 사업의 내용 안에는 커뮤니티 지향적 성격을 지니는 시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정책 담론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기책임론이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바로 의료/건강 분야와 관련한 ‘예방’이라는 사고 방식이었다.⁷⁰ 고령자 개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에 대한 강조는 재정 지출에 부담이 되는 중증의 요개호도(要介護度)에 이르지 않도록 고령자가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칫 요개호도의 상승을 개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014년의 개호보험제도 개정에서는 개호 예방 서비스 중 특히 커뮤니티 밀착형의 일부 서비스(가장 많은 급부 지출을 보이던 방문개호와 통소개호)를 급부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역 복지 사업인 ‘개호 예방/일상 지원 종합 사업’으로 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자기 부담으로 비싼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결국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약 100만 명 가량의 고령자 및 그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하게 된 것이다.⁷¹

개호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복지 전반에 걸쳐 점점 강화되는 ‘지역공생사회’라는 정책 방향은 커뮤니티 담론의 언어를 사용한 교묘한 자기

69 石田光規, 『孤立の社会学: 無縁社会の処方箋』, 21쪽. 그리고, NHKスペシャル取材班의 『無縁社会: 「無縁死」三万二千人の衝撃』를 통해 볼 수 있는 여러 진술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회보장 등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에는 인간관계상의 문제로 귀속시켜 버리는 전형적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70 예를 들어, 1956년의 후생백서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1950년대부터 일본 정부의 건강 관련 담론이 ‘자기책임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厚生省, 『厚生白書 昭和32年版』, 1956).

71 宮本恭子, 「介護保険制度施行15年の総括: 介護保険制度改正の方向性と課題」, 『社会文化論集』 12号, 2016, 26쪽.

책임론 전개의 매우 전형적인 모습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6월 각의결정을 통해 제시된 후생노동성의 비전인 ‘일본 1억총활약플랜’ 안에 위치한 ‘지역공생사회’는,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주체가 ‘자신의 일’로 여기며 [지역의 일에] 참가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세대나 분야를 넘어 ‘통째로’ 연결됨으로써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보람,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⁷²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지역 생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맡 그대로 ‘통째로’ 넘겨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이야기 하자면, 지역복지 내지는 커뮤니티 비전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고령자를 돌보는 것이 아닌 고령자가 돌보는’이라는 사고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지역공생사회’라는 비전이다. 즉, 현재 일본의 고령자 복지를 이끌고 있는 주요 제도 및 사고 방식의 방향은 지역과 커뮤니티에 대한 듣기 좋은 담론적 자원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지역/커뮤니티의 역할을 강조/기대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은 지역의 고령자 개개인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립과 자조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향해 있던 ‘개인책임론’이 지역과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변형되고 확대된 형태의 개인책임론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고령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일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점점 더 부담이 늘어 가기만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 고령자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도, 단 한 사람도 고독사라는 죽음을 맞이 하지 않는 커뮤니티 ‘만들기’도,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에 기대를 거는 정책에 대해 붙여지는 (그것이 만일 가능한 것이라면) 성공 혹은 실패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

72 厚生労働省 我が事・丸ごと地域共生社会実現本部, 『『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当面の改革工程)』, 2017, 2쪽.

것인가라는 어렵고 복잡한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나가며

이 논문에서 일차적으로 보이고자 했던 것은 일본에서 고독사라는 현상이 이야기되는 주된 방식, 즉 중심적인 고독사 담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였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라는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한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의 전개 양상에 대해 되짚어 보고, 이것이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원된 구체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 담론 중심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인간관계가 희박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의 끈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다시금 단단히 연결시키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문제에 대해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전적으로 무효한 것은 분명 아니다. 커뮤니티의 재생, 부활에 의한 '관계'의 회복 내지 재구축은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발현되고 있는 '죽음'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죽음의 '발견'에 있어서는 강점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관계'의 회복 내지 재구축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놓인 일차적인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이다.

일본 내에서 고독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로서 이야기되는 커뮤니티의 사례들이 보여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강한 헌신을 감내할 수 있는 주체들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노력이 성공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주체들이 현실적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강력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이미 그 바탕에 강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 유대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이러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주체가 존재하고, 그들/그녀들에 의한 활동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

도, 그 성공이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독사 현상은 죽음의 전과 후에 있어서 개인이 놓인 사회적인 상황 모두를 아우르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구축에 기반한 접근은 죽음이라는 발현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 즉 활성화된 커뮤니티와 그 구성원으로서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기에 발견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구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어찌할 수 없이 죽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죽음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성공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이들 성공은 고독사 현상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측면에 제한된 것이다. 단순히 ‘죽음’이 아닌 ‘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태와 관련한 측면에서의 성공과는 별개인 것이다.

한 개인이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뒤집어 표현하면 한 개인이 홀로 살아가는 것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실제로 고독사로 간주되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상황은 대체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공통적이었다. 직업을 잃거나 혹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전전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상황,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혹은 이러한 상황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가족을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이혼 등에 의해 가족 관계로부터 잘려 나가 홀로 살아가게 된 상태, 고독사는 그러한 삶의 문제 뒤에 단지 죽음이 놓여 있을 뿐인 상황에 붙여지는 이름에 불과하다. 즉 죽음이라는 현상을 지운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죽음을 회피함으로써 삶의 문제는 계속된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이러한 죽음의 위험성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커뮤니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닐까?

고독사에 대한 통일된 명확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고독사 관련 대응들이 실제 고독사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현시점의 일본에서 고독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⁷³ 즉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2007년 후생노동성의 정책 시행 이후 십수 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고독사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은 아닐까?

물론 담론과 정책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더구나 복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정책의 경우에는 더욱욱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담론이라는 틀을 통해 복지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의 작업 역시 그저 한계와 과제만을 노출한 채 단지 문제 제기의 지점에서 끝나 버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일본의 고령자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질게 드리워진 커뮤니티 지향성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러한 문제 제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 고독사 담론 전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 현상과 이러한 담론에 의존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집중하고자 했기에, 어쩌서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에서 고독사 담론의 중심 담론이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다루지는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커뮤니티 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고독사라는 현상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해 가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선택된 전략적인 결과일 수도 있으며, 지역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복지정책의 재편과 관련한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

73 2022년 6월에 공표된 일본 내각부의 2022년도판 『고령사회백서』를 보면 ‘고립사로 생각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로, 『고령사회백서』가 근거로 제시하는 데이터는 도쿄도감찰의무원의 통계로, 도쿄 23구의 독거 고령자(65세 이상)가 자택에서 사망한 이상사(異狀死)의 수치다(2011년 2,618명에서 2020년 4,238명으로 증가). 이와 유사하게,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 가운데 ‘입회자가 없는 사망자 수’의 증가(2010년 2,504명에서 2019년 3,435명으로 증가) 또한 고독사의 증가를 의미하는 수치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논하기 위해서는 고독사와 관련한 여러 유형의 담론들이 서로 어떻게 경합하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제시한 담론의 유형 구분은 고독사 담론에 대한 엄밀한 유형학을 제시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개념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독사 담론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른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의 관련 또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커뮤니티 담론이 어째서 고독사 담론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담론’ 외부의 담론 전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방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이 논문의 한계로 지적함과 동시에 추후 독립된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특집 | 초고령화 일본, 다층적 삶의 정경

일본의 고독사 담론: 커뮤니티 담론의 전개와 일본 고령자복지의 방향성 | 오독립

고독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는 현상이다. 더불어, '죽음' 그 자체뿐 아니라 죽음을 전후로 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독사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현상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이 사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지극히 '담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고독사 현상이 이야기되는 데 있어서 관찰되는 담론의 전개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양상은 크게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3가지 유형의 담론 형태를 띠며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의 극단적 사례로서 고독사를 다루는 담론 구조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추진된 고독사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담론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서 지바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를 분석한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담론이 정책과 연결될 때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커뮤니티 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고독사, 일본, 커뮤니티 담론, 일본 고독사 정책, 도키와다이라

일본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풍경 | 안지나

이 글은 현대 일본의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표상을 사에 슈이치(佐江衆一)의 『노숙가족』(老熟家族, 1985)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형 복지정책은 가족에 의한 노인개호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으나 급속도로 진행된 핵가족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가족에게 정신적·경제적 개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개호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노숙가족』은 개호살인과 안락사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 노년문학에서 특히 독특한 작품이다.

『노숙가족』은 요코하마의 뉴타운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남매가 동거하는 화목한 삼세대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개호살인 사건의 보도로 시작한다. 경찰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의 표정을 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뢰로 이루어진 촉탁살인을 의심한다.

MULTI-LAYERED LIFE-SCAPE IN SUPER-AGING JAPAN

Discourse on the “Kodokushi” in Japa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Discourse and the Direc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Japan | OH Dok-lip

“Kodokushi,” or solitary death, is a phenomenon that does not yet have a clear definition based on objective criteria. In addition, it is a complex phenomenon related not only to “death” itself but also various aspects surrounding before and after of deat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o recognizing and coping with kodokushi as a “social problem” involves an examination of how the situation is “told” in society. With this regard, kodokushi can be analyzed as a “discursive” phenomen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discourse over kodokushi in Japan. In Japan, the discourse has developed in three ways: welfare/institutional discourse, personalization discourse, and community discourse.

What occupies the most central position is the discourse that views kodokushi as an extreme example of social loneliness and isolation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community and disconnection of human rel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mmunity discourse has maintaine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kodokushi discourse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ommunity discourse on related policies promoted by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2007, and analyzes the case of Tokiwadaira housing complex in Chiba Prefecture that played a key role in this process. Analysis of the Tokiwadaira case and the like reveal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issues that may arise as community discourse is linked to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ation of the community-oriented direction on which current Japanese welfare policies strongly depend.

· **Keywords:** kodokushi, Japan, community discourse, Japanese kodokushi policy, Tokiwadaira

Scenes of Death Depicted in Japanese Elderly Literature | AHN J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presentation of death in Japanese elderly literature through Shuichi Sae’s novel *The Elderly Family* (1985). In Japanese welfare, the basic policy for the care of the elderly was “home care” by family members. The rapid progress of the nuclear family and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have placed a psychological and economic burden